

文 대통령의 개헌 강공... “해외 순방중인 26일 발의”

국회 합의엔 文발의 취소할수도
동시 투표엔 비용 1200억 절감
文대통령, 임시국회 연설도 검토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가 26일 이전에 개헌안을 놓고 합의를 도출하면 문 대통령은 이를 존중해 대통령 발의를 취소할 수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일부 정치권의 반대에도 개헌안 발의를 강행키로 한 것은 오는 6월 13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국민과 약속을 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1200억원 이상의 국

민 세금을 더 써야 한다”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21일 개헌안 발의도 검토했었다. 이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

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발의 날짜를 26일로 미룬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헌법은 대통령 개헌안인든, 국회 개헌안인든 발의 후 60일 이내에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민투표 18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모두 합하면 78일이 물리적으로 필요한데 (6·13지방선거일에 맞춘)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베트남 국민 방문과 아랍에미리트(UAE) 공식방문이 예정돼 있다.

발의 날짜로 21일이 검토됐던 것도 순방직전에 결재를 끝내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회의 뜻을 받아들여 26일에 발의기로 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일정 사이에 세 차례의 전자결재를 해야 한다. 개헌안에 대해 ▲국무회의의 상정시 ▲국무회의의 의결 후 국회 송부시 ▲의결 후 공고를 하기 위해서 등 각각의 결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안에 대해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초청해 대화하고, 정무수석이나 비서관들을 국회에 보내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을, 21일에는 지

방분권과 국민주권을,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내용 등을 사흘에 걸쳐 모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개헌안의 내용이 너무 많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나눠서 공개하기로 했다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개헌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3가지”라면서 “6·13 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해야하느냐, 아니냐인데 이에 대해선 압도적으로 동시투표를 해야한다고 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권력 구조 형태도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 변형된 의원내각제 중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국민의 일반적 의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지막 쟁점이 개헌 발의 주체인데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를 해도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할 시간이 있는 만큼 (일부에서)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겨라’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문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안을 발의한 뒤 공고가 되더라도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개헌안 발의 26일로 미뤘지만... 野 “관계개헌” 반발

野, 책임총리제로 국가권력 분산해야
우원식 “국회가 먼저 해야할 일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21일로 예정돼 있던 정부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늦췄지만 여야는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한만큼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에 끌려가는 모습의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책임총리제가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난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그동안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되는 ‘2+2+2 회의’ 등이 (한국당의 반대로) 계속 안 되지 않았다. 섭섭하고 유감스럽다”며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어떤 연유가 있

나. 5일간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당의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 연기 결정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우선 민주당은 사실상의 국회 개헌안 마련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 발의를 위해 마지막 협상과 결단이 남았다”며 “촛불 혁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 개헌 추진에 (야당도) 동참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6월 개헌안 발의-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로 6월 개헌을 완성하자고 하는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정점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개헌안 등 정국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국당이 6월 발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개헌을 하지 말자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책임총리제 주장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쓰고 ‘내각제 개헌’이라고 읽는 것이다. 총리의 국회 추천 또는 선출 주장은 국민 선호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관계개헌 명분 확

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스스로 생각해도 관계개헌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궁색하게나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면서 “더는 개헌을 정치적이고 정략의 도구로만 바라보면서 개헌 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창원 기자

6·13 공천 본격화... ‘넘치는’ 與 ‘텅빈’ 野

더불어민주, 실무회의 열고 일정논의
자유한국, 이석연 불출마 등 ‘인물난’

6·1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19일 중앙당 공천 관련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며 공천 작업에 시동을 걸었으며, 야당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인재영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다만,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여당에 예비 후보자들이 물리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으며 옆친데 뒷친격으로 전략공천에 대한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등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 공천 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정성호 위원장, 김경협 부위원장, 김민기 수석 사무부총장(간사), 한정에·박경미·이재정 의원,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최자진 연세대 정외과 교수, 강수정 변호사 등이 선임됐으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김명진 전략기획위원장(간사), 윤후덕 의원, 이수진 중앙당 공동노동위원장, 정성호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이근형 원지건설팀 대표, 정한범 국방대 정치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실무회의를 열고 향

후 위원회 일정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시작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인물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표로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 제안을 받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욱 인재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의 전략공천 방침에 대한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중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현 시장,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현 시장,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현 시장, 충북지사 후보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 제주지사 후보 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중앙-시도당 맑은 공천 연석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방훈 전 제주 정부부지사 등 5곳의 후보를 전략공천한 바 있다.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한 김경기 전 중국 상하이 총영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 자메시지로 “1995년 서울시장 직선제 도입 후 한국당은 그 전신이 되는 당에서부터 자유경선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며 “이토록 자랑스러운 원칙과 관행을 홍대표가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고 침체되고 기가 꺾인 보수세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상식”이라며 “원래부터 전략공천 예정이었다면 서울시장 후보는 왜 공모했나. 정치사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부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종혁 전 최고위원도 부산시장 후보로 서병수 현 시장이 확정되자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마시던 물에 침 뱉지는 않겠다. 누구도, 당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반시대적, 반개혁적 길을 걷다 망한 새누리당의 전철을 답습하는 한국당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mediaco@